

제1059호 2026. 5. 29.

# 건설동향

# BRIEF<sub>ing</sub>

## • 공공조달 AI 대전환, 공사원가검증의 핵심 쟁점과 대응

- 조달청, 공사원가검증 AX(AI Transformation) 본격화
- AI 공사원가검증시스템의 4가지 쟁점과 5가지 법적 책무
- 공공공사 조달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 • 2026년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변화와 건설산업 시사점

- IRENA 통계로 본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과 시장 확충 속도
- 에너지 안보·비용 하락·전기화로 요약되는 최근 3대 트렌드
- 그린 빌딩 및 분산형 전력망 중심의 건설산업 신재생 시장 참여 전략



# 공공조달 AI 대전환, 공사원가검증의 핵심 쟁점과 대응

- 공공공사 AI 원가검증 시대 도래에 따른 대응 방안 -

박상헌(부연구위원 · shpark@cerik.re.kr)

## 조달청, 공사원가검증 AX(AI Transformation) 본격화

- 조달청은 2025년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 개혁 방안으로 조달행정 AX(AI Transformation) 발표했으며, 2026년 2월에는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전략과제<sup>1)</sup>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공사비 검토를 제시함.
  - 조달청은 공사비 검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2026년 1월 공사원가검증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이하 ISP)을 발주하였으며, 이는 6개월의 실증(PoC)을 통해 단가·내역·도면에 AI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 후 본사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추진 구조로 구성됨.
  - 공사비 검토 업무에 AI 도입이 본격화될 수 있었던 핵심 동력은 ①다년간의 사업 수행으로 단가·내역·도면 등 방대한 데이터 확보, ②검토 프로세스가 비교적 정형화되어 AI 기술 접목 용이성이 작용함.

〈표 1〉 조달청 보유 표준자료 현황 (2025.12.15. 기준)

구분	자재	일위대가	표준시장단가	기타(노임 등)	합계
보유 품목수(품목/비중)	6,005개 / 25%	8,102개 / 34%	6,279개 / 26%	3,522개 / 15%	23,908개 / 100%

자료 : 조달청(2026), 공사원가검증시스템 ISP 제안요청서 §2 다. 보유 표준자료 현황.

- 공사비 검토 관련 실제 사례로 2026년 3월 16일 「공공건축물 설계예산적정성 검토 AI 분석 앱」(연 13조 원 규모)을 공개하였으며, 같은 해 4월 30일에는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시스템」을 개통하여 매년 8,000건 이상의 물품 계약 업무 처리에 AI를 접목함.
- ISP와 보도자료의 공통점은 단순 업무 자동화가 아니라 AI가 수백 쪽 보고서를 1분 만에 요약하고 유사 업·적정 단가를 추천하는 ‘의사결정 지원형’ 시스템이라는 점이며, 이는 공사비 검토 업무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함.
- 조달청 담당 실무자는 단순한 ‘시스템 사용자’의 역할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며, AI의 1차 판단 결과물을 검증해야 하는 ‘검증 대상자’의 역할로 전환될 가능성이 큼.

1) 공공조달을 통한 AI 산업 활성화 선도 방안은 공공조달 개혁방안(2025.11.)과 AI 산업 성장의 핵심 촉매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과 마중물이 되기 위한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함.

- 공사원가는 「국가계약법」 제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나, 조달청은 공사원가 데이터 정합성과 검토 시간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음.
  - ISP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이, 최근 3년간 건축공사 자재의 조달청 코드 일치율은 35.3%(22) → 28.9%(23) → 27.6%(24)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표준품셈 코드 활용률도 17.4%(22) → 17.2%(23) → 16.5%(24)로 하락하여 자동 검토를 제약하는 요인임.
  - 현행 공사비 검토 업무는 담당 실무자의 개인 역량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그 결과 동일한 공사일지라도 누가 검토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남.
  - 구체적으로 담당 실무자 1인당 연간 약 112건, 1건당 평균 16시간 동안 투입할 수 있는 업무량은 심도 있는 검토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며, 도면 검토 업무는 시스템 부재로 더욱 부족한 것이 현실임.<sup>2)</sup>
- 제안요청서에 따른 공사원가검증시스템의 핵심 기능 요구사항은 4개로 볼 수 있으며, 각 요구사항은 데이터 분석·구성 → AI 검토 실증 → 정보화전략 수립의 3단계 구조를 공통으로 따름.
  - (유사공사 자동 비교) 품명·규격 등 속성을 기준으로 자동 탐색하여 연관도가 높은 항목을 추천하고, 동일·유사 품명의 최신·최빈 적용 단가·내역과 공사명·공사금액 등 조건별로 제시함.
  - (단가 이상치 탐지) 품목별 단가 분포를 분석하여 기준단가를 설정한 후 과다·과소 등 이상 여부를 자동 탐지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함.
  - (내역 교차 검토) 표준품셈 기준으로 내역 구성요소(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과다·과소 여부를 판단하고, 개별 내역의 시공조건에 따라 내역 항목의 중복·누락 여부를 교차 검토함.
  - (도면·내역 정합성) 도면 이미지의 좌표·치수·기호 정보를 벡터화하여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통해 내역 항목과 매핑하고, 불일치·누락 항목을 시각화함.

## AI 공사원가검증시스템의 4가지 쟁점과 5가지 법적 책무

- 공사원가 검증에 AI 도입이 가져올 변화는 관련 업무 효율성 향상에 그치지 않으며, 검토 결과의 책임 주체와 판단 기준이 재편된다는 점이 본질임.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4가지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으며, 반드시 검토 및 정비해야 할 필수 과제임.
  - (쟁점① 데이터 신뢰성) ISP에 명시된 자재 코드 일치율과 표준품셈 활용률의 수준이 향상되어도, 본질적 한계는 정형화된 데이터로 학습된 AI는 ‘평균에 가까운 공사’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음. 결국 발주기관·지역·현장의 고유 특성이 코드화되지 않은 비표준화된 공사일수록, AI 추천 정확도·신뢰도가 낮아질 우려가 있음.
  - (쟁점② 설명 가능성·블랙박스 행정)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2026.1.22. 시행)

2) ISP 제안요청서 §3 가. 추진 필요성에 명시된 구조적 한계에 관한 일부 내용

은 고영향 AI<sup>3)</sup>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및 AI 설명 방안에 대한 수립과 사람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AI 검증 시스템이 단가·내역의 조정 사유에 대한 설명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의제기 및 계약 분쟁이 증가할 여지가 있음.

- (정책<sup>3</sup> 표준화·현장 특수성 충돌) AI 모델은 본질적으로 축적된 데이터의 ‘평균값’에 수렴하는 판단을 선호하나, 실제 건설 현장은 도심지 야간공사·협소부지·민원 대응·고난도 가설공법·도서벽지 운반 할증 등 특수조건에 따라 공사비 편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함. AI 모델이 이상단가 탐지·판단 이전에 현장 고유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과다 단가로 식별되는 오탐지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음.
- (정책<sup>4</sup> 책임소재) 「행정기본법」 제20조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의 처분을 허용하되 ‘재량 처분 제외’를 명시함. AI가 단가에 대한 이상치·중복·누락을 자동 탐지하는 순간 검토자의 재량은 사실상 ‘AI 추천 수용’으로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제도 기대효과 오류) ISP에 명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제출 마감일까지의 법정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이므로, 이를 공사원가검증시스템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대상으로 연결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오히려 공사원가 사전검토(「조달사업법 시행령」 제28조)의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한 행정 혁신 사례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사원가검증시스템<sup>4)</sup>은 고영향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4조 따른 5가지 책무가 부과될 수 있음. 따라서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은 5가지 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구성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에 따른 기관별 역할

책무	발주기관 역할	수행기관 역할
① 위험관리 방안 수립·운영	• 검토 업무 위험요소 식별·승인 - 업무관리 최종 책임	•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설계
② AI 설명 방안 수립·시행	• 설명 수준 기준 결정 - 설명 가능성의 통제 책임	• 출처·신뢰도 표시 기술 구현 - 공급사의 윤리적 AI 관행 입증 책임
③ 이용자 보호방안 수립·운영	• 이의제기 절차 마련 - 행정기관 처분성 검토 책임	• 데이터 보호·프라이버시 안전장치
④ 사람의 관리·감독	• 책임자(검토자) 결재선 설계 - 기관 내 AI 책임자 선정	• 전문가 판단·감독을 위한 휴먼인더루프 설계
⑤ 안전성·신뢰성 확보	• 보관·관리 책임 부담 - 발주기관 데이터 관리 책임	• 정보화 사업 산출물 관리 책임

자료 : RICS, Responsible Use of AI in Surveying Practice(2026.3.9. 시행).  
UK GOAI·WEF·CCS, Guidelines for AI Procurement(2025.1.29. 개정).

3)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정의  
4) 공사원가검증시스템 ISP 제안요청서에 “동일한 공사라도 검토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전제하고 있어 AI 산출물이 검토 결과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됨. 또한 연간 26.1조 원·3,865건 규모와 시공사의 영업 자유·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고영향 AI에 해당할 소지가 큼. 이는 공공조달계약 평가 AI를 고위험으로 분류한 EU AI Act 및 건설·공사비 평가 AI를 ‘중대 영향’ 영역으로 규정한 RICS 표준의 국제적 흐름과도 부합함.

- 공무원가검증시스템 도입에 관한 실증(PoC) 요구사항(SFR-001~003)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 설명만 명시되어 있을 뿐, ‘얼마나 잘 수행하는가’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 지표는 부재함.
  - 공무원가검증시스템 도입 목적은 원가 검토의 품질·처리 개선과 함께 예산집행 효율성·정책 신뢰도 향상이나, 성과 지표 부재로 결과의 신뢰성 상실 및 AI 기술 도입의 정당성을 입증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음.

〈표 3〉 실증 요구사항별 성과 지표 예시<sup>5)</sup>

실증 요구사항	성과 지표 예시	목표 수준 예시
공통	검토자 신뢰도(5점 척도)	담당 실무자 사용성 평가 : 3.5 이상
	검토 시간 단축 비율	ISP 명시된 단축 효과(50%)
SFR-001 단가 검토	유사단가 추천 상위 5개의 정확도	검토자가 채택한 단가의 반영 비율 : 80% 이상
	이상단가 탐지 점수	정밀도·재현율 균형 거짓 정보 최소화 : 0.75 이상
SFR-002 내역 검토	표준내역 자동 매칭	검토자 판단과 일치 비율 : 75% 이상
	중복·누락 탐지율	사후검토 결과 : 90% 이상
SFR-003 도면 검토	도면-내역 매핑률	매핑 성공 비율 : 70% 이상

## 공공공사 조달을 위한 기업의 대응 방안

- 조달청의 AI 공무원가검증은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넘어,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견적·설계변경·입찰 등 핵심 실무에 대한 데이터 관리 방식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임. 기존 시공능력에 더하여 데이터 설명 역량이 수주 경쟁력으로 부상할 것임.
  - 공무원가검증시스템은 ‘공급망관리 시스템’과 ‘가격조사 비교 시스템’ 등을 포함한 조달청의 공통 AI 플랫폼 환경<sup>6)</sup> 내에 구축됨. 공공조달 시스템이 대전환함에 따라 공공공사 참여 기업은 단순 서류 제출 수준을 넘어,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임.
  - (견적 업무 변화) 경험이 풍부한 견적 담당자의 ‘경험에 의한 단가 판단’에서 ‘이 단가가 왜 합리적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근거의 품질이 더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기업은 유사 실적·현장 조건 차이·자재 출처·시증물가지 인용 출처 등을 견적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해야 함.
  - (설계변경 대응) AI는 누적된 데이터 속에서 패턴 식별에 강점이 있으므로, 동일한 업체가 같은 공종의 반복 증액 이력이 누적되면 리스크로 탐지 또는 분류될 수 있음. 현장에서는 사진·지질조사·설계 오류 입증 문서 등 사유에 관한 객관적 자료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입찰 전략)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시스템’(2026.4.30. 개통)이 입찰 이력을 분석하여 참여 가능성 높은 입찰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향후 입찰가 자체도 AI 분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함. 따라서 지나친 저가·고가 전략 모두 ‘이상치’로 탐지될 수 있어 설명 가능한 가격 투찰 전략 마련이 필요함.

5) 본 보고서에 수록된 성과 지표 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구자가 구성한 참조용 가이드라인이며, 실제 검증을 위한 잣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6) 조달청은 운영 중인 기존 시스템과 AI 기술 도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발주지원·가격관리·심사평가·계약관리 등) 강화를 목적으로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임(출처 : 대한경제, 공공조달 행정 모든 단계 ‘AI 서비스’ 강화, 2026.5.8.).

- AI 검증이 도래함에 따라 공공건설 시장의 수주는 ‘누가 더 정제되고 구조화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의해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됨. 기업 내 단가·실적 데이터의 자산화뿐만 아니라 현장 고유의 특수성까지 기록·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해야 함.
  - 기업의 규모에 따라 보유한 자원·인력·시스템 수준이 다르지만, 데이터 자산화의 본질은 ‘얼마나 많이 갖추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는가’가 핵심임. 즉, 이미 보유한 데이터가 ‘무엇이고’, ‘어떤 형태’인지 빠르게 파악하여 일관되게 정리해야 함.
  - AI 검증에 따른 단가 삭감이나 이상치 판정에 논리적 대응을 위해 공공공사 참여 기업은 공사실적·자재 단가·하도급 단가·노무비 등 데이터 체계화와 함께 현장 고유의 특수성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민원 대응, 협소부지 가설 등)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가 요구됨.
  
- 원가 데이터의 자산화는 민간공사 공사비 산정·검증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일례로 정비 사업에 공사비 산정 근거의 객관성 확보와 물가변동·설계변경에 합리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사비 분쟁 해소에 매개체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
  
- AI 검증은 단가 외에도 내역·도면·설계변경에 대한 통합 분석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업 내 특정 부서의 대응이 아닌 통합적 대응 체계도 고려해야 함.
  - AI 도입에 따른 공공조달 환경 변화에 통합 대응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으려면, 모든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책임 분담과 함께 공통된 양식 및 데이터 표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일례로 RACI(Responsible, Accountable, Consulted, Informed) 매트릭스는 프로젝트 내 업무에서 팀원의 역할·책임의 명확한 구분과 작업 누락을 방지하므로, 대응에 효과적인 관리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
  - 예를 들면, 공사원이 산정·검토에 대한 책임(R)은 누가 지고, 어느 부서에서 최종 승인 책임(A)을 지며, 어느 부서가 협의(C) 또는 통보 대상(I)인지가 하나의 표로 명확해져 누가 먼저 대응하고 어떤 산출물을 제출해야 하는지까지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대응 시간 단축과 책임 공백을 차단하는 효과로 이어짐.

〈그림 1〉 RACI 매트릭스를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관리 사례

실행(R) 직업 책임 또는 완료 책임	책임(A) 의사결정, 프로젝트 성공 책임 부여	협의(C) 조언 제공, 완료에 대한 책임 미부여	통보(I) 최신 상태로 유지,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프로젝트 활동	제품 관리자	디자이너	개발자	QA 엔지니어	콘텐츠 관리자
대상과 목표 정의	R	A	I	C	A
웹사이트 프레임 제작	C	I	R	I	A
사이트맵 제작	A	R	C	R	C
디자인 레이아웃	I	C	A	A	I
웹사이트 개발	R	A	I	R	C
기능 테스트	I	R	C	C	R
웹사이트 출시	C	A	I	C	A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편저(2026), “AI 시대가 바꾸는 건설산업”, p.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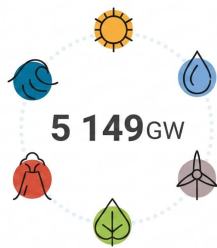
## 2026년 글로벌 에너지 트렌드 변화와 건설산업 시사점

이종한(부장 · ljh@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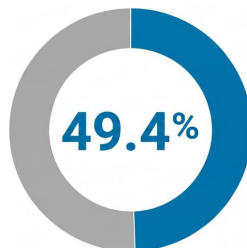
### IRENA 통계로 본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 현황과 시장 확충 속도

-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지난 3월 말경 글로벌 재생에너지 공급량 통계(Renewable Capacity Statistics)를 발표함.
  - 2025년 말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총 5,149GW에 달하였으며, 이는 설치된 전체 발전 용량의 49.4%에 해당하는 수준임(〈그림 1〉 참조).

〈그림 1〉 2025년 세계 재생에너지 통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2024)



설치된 발전용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 15.5%

전년 대비 성장률

692 GW

2025년 추가된 용량

자료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IRENA).

- 2025년 증가한 에너지 발전 용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85.6%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재생에너지 투자 급증으로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조만간 추월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임.
- 2025년 추가된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 에너지가 511GW로 1년간 증가한 재생에너지의 75%를 차지하였으며, 풍력발전이 159GW가 증가하여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96.8%에 달함.
- 지역적으로 아시아는 513.3GW를 증설하면서 21.6%의 성장률을 보임. 아프리카도 11.3GW를 증설하여 15.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전 세계의 총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기준으로 보면, 아시아가 2,891GW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이 934GW로 뒤를 잇고 있음. 북아메리카 614GW, 남아메리카 333GW, 아프리카 82GW, 중미 및 카리브해 지역이 총 21GW로 가장 낮은 비중을 기록함.

## 에너지 안보·비용 하락·전기화로 요약되는 최근 3대 트렌드

### ● 국가의 핵심 안보 문제로 격상되는 에너지 이슈

-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시작하면서 석유와 가스의 공급사슬 붕괴로 전 세계가 극심한 혼돈에 빠짐. 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였으나, 전기 생산을 화석연료에 의지하던 많은 국가는 큰 어려움을 경험함.
-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재생에너지 비중 최대화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크게 낮춘 국가가 경험한 회복 탄력성은 이후 많은 국가가 에너지 정책으로 벤치마킹하게 될 것으로 보임. 결국, 미국-이란 전쟁은 신재생 에너지 투자의 불쏘시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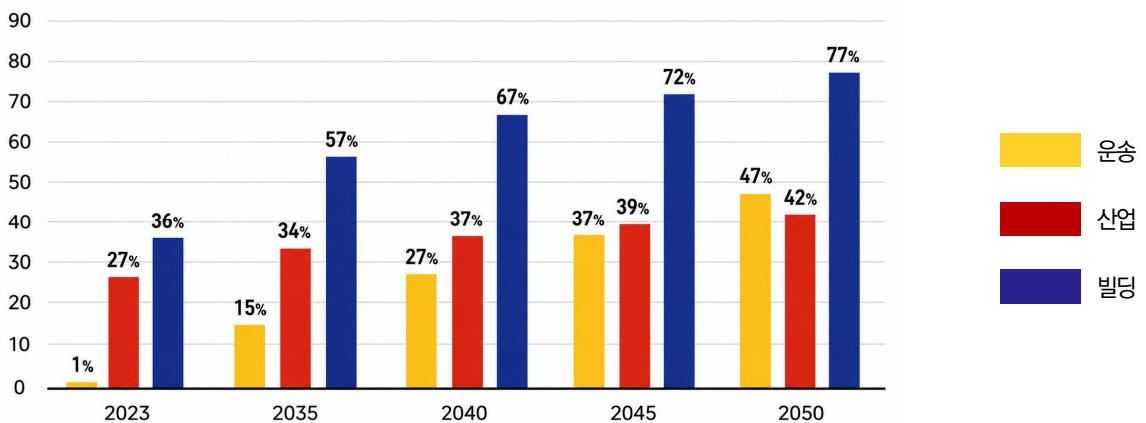
### ● 생산비용 하락 및 저장장치 기술 발달로 저렴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로 진화

- 재생에너지 생산 비용 하락은 청정 전력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임. 태양광 및 풍력발전은 많은 지역에서 가장 비용 경쟁력이 높은 새로운 전력이 생산됨. 2010년부터 2025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용은 88% 이상, 육상 풍력발전 비용은 56% 이상 하락하여 재생 전력이 에너지 수요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됨.
- 재생에너지 기술의 비용 경쟁력은 더 낮고 안정적인 전기 요금을 보장하여 가정과 산업 부문의 장기적인 전기 요금 부담 능력에 큰 도움이 됨. 특히 에너지저장장치 기술의 발달로 재생에너지 발생의 간헐성을 해소하게 되면서 효율성마저 높아지고 있음.

### ● 급증하는 수요 속 건물분야 전기화(Electrification) 가속화 필요

- 아래 <그림 2>는 지구 온난화 목표(1.5도)를 맞추기 위한 전기화 비율 예상 목표치를 나타냄.

<그림 2> 글로벌 전기화 비율 예상



자료 : International Renewable Energy Agency(IRENA),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전기사용비율(Share of Electricity, %).

-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3년에서 2035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1%에서 15%로 14% 증가가 필요함. 빌딩은 냉난방, 요리 등 화석연료 대신 늘려야 하는 전기 사용 비중이 36%에서 57%까지 21%의 증가가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이에 따라 전기 사용 비중 확대를 포함한 그린 빌딩 관련 연구와 투자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린 빌딩 및 분산형 전력망 중심의 건설산업 신재생 시장 참여 전략

### ● 시대의 요구에 건설산업 화답 필요

- 도로, 교량은 물론 전력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에 해당함. 건설산업이 전통적인 인프라만 고집한다면 눈앞의 시장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기도 함.
- 산업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시장 참여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제도적인 개선도 주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대규모 산업단지, 스마트 도시개발, 재생에너지 단지과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개발 사업에 ‘전력망 구축과 관리’를 포함한 스마트 그리드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고속도로, 지하철, 철도 등 국가 인프라 투자 단계에서 송전망이나 국가 전력망 사업을 반영하여 저렴하면서 효율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 산업, 기업 차원의 다양한 참여 분야 검토 필요

-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이미 건설산업의 많은 역할이 필요함.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공사, 배전 설비 공사, 유지관리 등 생애주기마다 건설산업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함.
-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서 건설산업은 단순 시공이 아니라, 발전 인프라 구축, 대형 구조물 설계, 전력망 연결, 해양·토목 공사, 유지관리, 친환경 기술 적용 등 많은 부분에서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를 도모해야 함.
- 특히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중심, 대규모 발전소 중심 전력망 구조를 지역생산, 지역소비 형태의 분산형 에너지 전력망 구조로 바뀌나갈 예정이어서 다양한 건설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임.
-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기업과의 협업, 인수·합병 등 다양한 산업 전개 전략을 통해 투자 확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전력산업의 폭증에 올라탈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다수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력사업에 참여하거나 참여를 준비하고 있으나, 이제는 단순 건설을 넘어 대규모 장비와 자재 생산을 포함한 자본 투자 중심의 참여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